

중국의 영향력과 권위주의의 확산: 동아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곽동진 ■ 고려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는 권위주의의 확산(autocracy diffusion)이 개인들의 수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중국과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이 권위주의적 가치와 인식을 주변국 개인들에게 확산시키는데 기여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시아 바로미터조사(ABS)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주변국 개인들의 권위주의적 가치와 제도에 대한 태도가 중국에 대한 평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다. 중국과 인접한 동아시아 12개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중국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권위주의적 가치나 제도를 더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권위주의보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갖는 권위주의 국가의 등장이 그 주변국 개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권위주의, 민주주의, 확산, 중국, 동아시아

I. 서 론

2000년 이후 중국의 정치, 경제적 부상은 중국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기존의 국제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가져왔다. 특히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이 미국에 견줄 수 있는 G2의 한 축으로 성장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민주주의 확산 노력에 부정적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3A2075609).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E-mail: djkwak@korea.ac.kr)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권위주의 국가들의 민주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1991년 냉전의 종식은 체제로서의 민주주의 승리로 인식되었고,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민주주의 확산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해왔다. 예를 들어 미국을 비롯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국들은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대외원조를 꾸준히 증가시켜 왔는데 1989년 1억 달러에서 2000년 3억 달러, 2010년 9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권위주의 또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지원해 왔다(Tierney et al. 2011).

하지만 최근 중국의 부상이 주변국의 민주화를 지연시키고 권위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식 발전모델을 모방하면서 중국의 언론통제정책이나 강압적인 인권탄압정책과 같은 권위주의적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중국이 적극적으로 권위주의 정권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하며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저개발 국가들에게 대외원조를 제공해 왔는데, 아프리카의 독재자들이 인권이나 민주적 가치의 신장을 조건부로 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대외원조의 대안으로 중국의 원조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권위주의 체제를 공고화 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Bräutigam 2009; Carothers 2006; Dreher & Fuchs 2016; Halper 2010).

확산(diffusion)에 대한 논의는 주로 민주주의의 확산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물결처럼 특정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왔다(Huntington 1991). 또한 색깔혁명(Color Revolution)이나 아랍의 봄(Arab Spring)과 같은 민주화의 움직임들이 특정 지역에 인접한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확산에 대한 논의는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민주화나 민주적 제도나 정책이 특정한 시기에 일정한 공간 속에서 주변으로 확산된다고 분석한다(Goldring & Greitens 2020; Gunitsky 2018; Weyland 2012).

한편 권위주의의 확산에 대한 논의는 2000년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 경제적으로 부상하면서 주목받고 있다(Ambrosio 2009, 2010, 2012; Melnykovska et al. 2012). 소련의 붕괴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미국의 우세와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권위주의 체제들이 장기간에 걸쳐 존속하고 새로운 권위주의 체제의 등장이 계속되면서 권위주의도

확산된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특히 2000년 이후에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 발전에 힘입어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러시아가 잃었던 영향력을 점차 회복하면서 주변국가로 권위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논의가 제기된다. 하지만 실증적 차원에서 과연 중국의 부상이 주변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를 저해하거나 권위주의를 강화한다는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주변 동아시아 국가로 권위주의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국가를 주목하는 것은 양자 사이의 정치·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밀접성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는 해상을 경계로 인접해 있다. 지리적 인접성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관련성도 상당히 높다. 중국의 화교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체 화교 인구의 약 70 퍼센트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 사이의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2019년 기준으로 중국 수출의 약 33 퍼센트를 아세안(ASEAN) 및 한국, 일본, 홍콩, 대만, 몽골이 차지한다(Simoes & Hidalgo 2011). 이러한 접근성과 관련성으로 인해 중국의 영향력이 더 직접적으로 동아시아 국가에 확산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주변국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기존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확산에 대한 논의는 주로 제도적 차원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식 수준과 조직화 정도가 민주화와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적인 한 축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지역에서의 영향력 증가가 주변국 개인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권위주의의 확산이 주변국 개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개인 수준의 데이터를 통해 경험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이하의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확산에 대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고 확산을 추동하는 요인들에 대해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어떻게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주변국 시민들의 민주적 가치와 권위주의적 제도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제4장 및 5장에서는 경험적 연구설계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 연구의 함의와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고 차후의 발전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II. 확산에 대한 기존문헌검토

확산이란 관념이나 관행, 행태, 제도 등이 하나의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전파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한 집단내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Ambrosio 2010). 따라서 확산은 국제정치적 요인이 어떻게 한 국가의 국내 정치 및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이러한 확산은 명시적인 행위나 제도적 변화를 뜻하기도 하지만 개인들의 행태, 태도 또는 가치관의 점진적인 변화 과정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확산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지리적 접근성(geographic proximity), 연결성(linkage), 강대국의 명성(major power prestige) 등에 의해 확산이 발생한다. 첫째, 지리적 인접성(geographic proximity)은 물리적으로 인접한 두 국가 사이에서 확산이 발생한다는 개념이다(Gleditsch & Ward 2006). 따라서 확산은 물리적 거리에 반비례한다. 또한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우 유사한 지정학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국경을 맞대거나 물리적 거리가 짧을수록 정보와 물자, 인력의 이동이 신속하고 서로 비슷한 정치, 경제적 환경을 공유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책이나 정치적 사건이 확산되게 된다.

둘째, 연결성(linkage)이란 두 국가 사이의 상호작용 정도에 대한 개념으로 물리적 거리를 넘어서 두 국가 사이에 형성된 관계의 거리를 의미한다. 교통 및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물리적 거리의 절대성이 낮아지면서 지리적 거리 보다는 두 국가의 빈번하고 깊은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수록 확산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국가 간의 연결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는데, 경제적 관계(무역량, 자본투자, 대외원조 등), 정치적 관계(동맹, 동일한 국제기구 가입여부 등), 역사적 관계(식민지배관계, 민족적·언어적 동일성 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Goodliffe & Hawkins(2017)는 상호간의 교역, 동맹, 동일한 국제기구 가입여부 등을 통해 다양한 의존적 네트워크(dependence network)라는 높은 연결성이 형성하고, 이 의존적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강대국으로서의 위상(major power prestige)에 의한 확산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우월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가지는 영향력이나 레버리지에 의한 확산을 의미한다(Fordham & Asal 2007).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주변국들이 자신

들과 비슷한 제도나 정책이 유사한 경우 협력의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기에 자신들의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주변국에게 정책이나 제도를 확산시킬 동인이 발생한다. 또한 주변국의 입장에서도 강대국을 군사적, 경제적 발전의 롤 모델로 삼아 제도와 정책을 모방하거나 수용할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확산은 경제적, 군사적인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군사적 또는 경제적 힘이 크거나 단기간에 발전한 경우 강대국의 가시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에 따른 확산이 더 크게 나타난다.

확산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논의는 민주주의의 확산(diffusion of democracy)에 대한 논의이다. 민주주의의 확산은 Huntington의 지적처럼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냉전의 종식 이전에도 이러한 경향성을 보여 왔다(Starr 1991). 이러한 논의는 민주화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수준과 정책 등 민주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거쳐 진행되어 왔다(Brinks & Coppedge 2006; Cao 2010, 2010; Danneman & Ritter 2014; Elkins 2010; Gleditsch & Rivera 2017; Gleditsch & Ward 2006; Weyland 2019). 대표적으로 Gleditsch & Ward(2006)는 민주화가 지리적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공간 분석(spatial analysis) 방법을 통해 경험적으로 밝히고 있다. Brinks & Coppedge(2006)도 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이 지역 내 민주주의 국가의 비율에 비례하고 미국과의 지리적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최근의 Goldring & Greitens(2020)는 지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관념적인 권위주의 체제의 유사성에 따라 권위주의의 붕괴와 민주화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레짐이 지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관념적인 연결성을 따라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한다.

한편 최근 중국 및 러시아가 군사적, 경제적으로 부상하면서 권위주의의 확산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다. 권위주의의 확산이란 한 국가의 노력이나 영향력에 의해 다른 국가에서의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로 체제로 전환되거나 민주적 제도나 가치가 침식되는 현상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미국과 서방의 국가들이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도 자신들의 증가하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기존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세워 놓았던 가치나 정책, 관습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다(De Graaff & Van Apeldoorn 2018; Layne 2018; Wang 2017; Yan 2018).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해서 지역 내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는 주변국가가 동일한 권위주의 체제일 것을 선호하며, 이를 위해 권위주의 체제를 확산시키고자 한다고 분석한다(Bader et al. 2010).

중국의 영향력에 따라 주변국들이 어떻게 중국의 가치와 정책에 동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다. 기존 연구들은 중국과 교역이 많거나 연결성이 높을수록 유사한 외교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한다 (Flores-Macías & Kreps 2013; Kastner 2016; Lim & Mukherjee 2019). 좀 더 직접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주변국의 권위주의적 제도나 관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Lankina et al.(2016)는 러시아와 동유럽 사례에서 무역을 매개로 러시아가 동유럽 국가들에게 권위주의적 제도와 관습을 강화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Gamso(2021)도 중국이 자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억제하게 하기 위해 상대국의 대중 무역의존도를 매개로 하여 언론 검열(media censorship) 정책을 확산시키고 언론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경제적 지렛대를 활용하여 중국이 인권탄압정책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논의도 있다(Gamso 2019).

Ⅲ. 중국의 부상과 권위주의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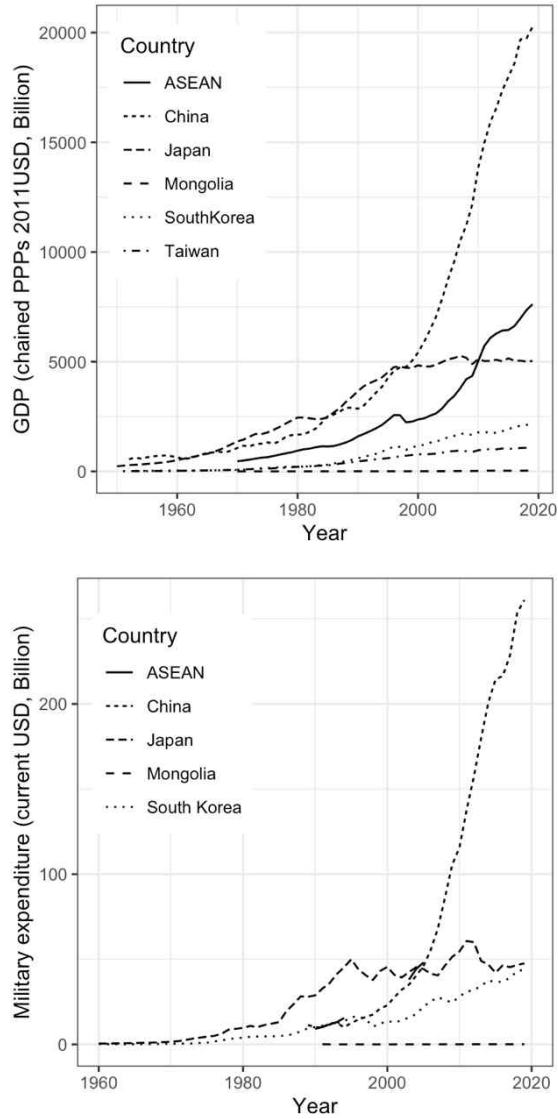
이 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어떻게 주변국 시민들의 자국 정부에 대한 평가와 권위주의적 제도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제시한다. 중국과 동아시아 주변국의 관계를 주목하는 이유는 기존의 확산에 대한 논의의 측면에서 권위주의가 확산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기 때문이다. 첫째, 지리적 근접성의 측면에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는 중국은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해상을 경계로 인접해 있다. 둘째,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맥락에서 높은 연결성을 갖는다. 중국은 아세안(ASEAN)을 비롯하여 한국, 북한, 몽골 등의 가장 큰 교역국이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경쟁과 협력을 반복해 왔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중국과 사대관계를 통해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경험을 공유한다. 또한 역내 다양한 지역 기구나 대화채널 등은 상호 간의 높은 연결성을 유지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2000년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G2 중 하나의 국가로 부상하면서 경제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주변국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권위주의가 주변국 시민들의 민주적 제도와 가

치에 대한 의식을 약화시키는가?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주변국 시민들의 권위주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대해 두 가지 이론적 경로를 제시하고 있는데, 중국의 정치경제적 부상에 따른 전시효과와 주변국의 권위주의적 통제 정책의 도입에 따른 개인들의 수용성 증가로 인해 권위주의적 가치와 인식이 주변국 개인들에게 확산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첫째, 중국모델의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에 따른 권위주의의 확산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주변국 개인들의 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이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따라 '권위주의 하에서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이라는 중국모델(China model)이 확산되면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제나 민주적 가치의 훼손을 그 비용으로 지불해도 된다는 인식을 증가시킨다. 그 동안 미국과 서구 유럽의 경제적 성장은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에 가장 효율적인 제도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다수의 연구들도 민주주의 제도적 장치와 정책들이 경제발전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평가한다(Alesina et al. 1996; North 1990). 하지만 중국모델은 권위주의적 통제와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을 통해서도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주변국 시민들에게 민주적 제도나 가치보다 권위주의가 경제성장에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중국의 영향력 또는 전시효과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가? 이를 명시적인 수치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국내총생산과 군사비지출의 규모를 변화 추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은 1960년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GDP와 군사비지출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데, 대략 2000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GDP와 군사비지출 모두 일본을 넘어서며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과 다른 동아시아 국가 사이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는데 2010년대를 넘어서면서 중국의 GDP와 군사비지출이 동아시아 모든 국가의 합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빠른 성장과 급속한 격차의 증가는 지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가를 더 강하게 체감하게 만들었다.



〈그림 1〉 동아시아 국가들의 GDP 및 군사비지출 변화 추이¹⁾

1) GDP는 Penn World Data 10(Feenstra et al. 2015)에서, 군사비지출은 세계은행(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자료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또한 중국과 동아시아 주변국들 사이의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가는 전시효과를 강화시킨다. 중국과의 물적,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 동아시아 국가들이며, 2000년 이후 해외직접투자(FDI) 뿐만 아니라 대외원조에 있어서도 가장 큰 수혜자가 주변의 동아시아 국가들이다(Malik et al. 2021). 예를 들어, 아세안의 경우 중국과의 교역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약 20%의 교역을 중국과 하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기준으로 약 6.7%의 투자를 중국에서 받고 있다. 이는 미국, 홍콩, 일본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직접투자국에 해당한다.

둘째, 주변국 정부들이 중국의 언론이나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 정책을 모방하면서 권위주의적 정책과 가치를 내면화하는 경로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권위주의적 정책의 확산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유인이 존재한다. 우선 상대국이 유사한 경제 및 사회 제도를 가지는 경우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치적 차원에서 유사한 정책을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는 자신들의 체제에 취약점인 언론의 자유와 인권 문제를 공격하는 서구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주변국들에게 자신들의 언론통제정책이나 인권정책을 전파시킴으로써 주변국의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하여 이들의 붕괴에 따른 민주주의의 확산을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자신들의 체제를 보호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이 자신들의 언론통제정책이나 기술을 다른 국가에 대외원조나 기술지원의 형태로 전파해 왔다.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와 같은 국가들이 이미 중국의 소셜미디어 통제정책을 받아들여 활용하고 있으며(Weber 2017), 중국이 자신들의 인터넷 감시장비와 기술을 대외원조나 기술지원의 형태로 다른 국가들에게 전파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Bailey 2017). 최근 몇몇의 연구가 중국의 언론통제정책이나 인권정책의 확산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Koesel & Bunce(2013)는 중국이 동유럽의 색깔혁명 이후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언론 통제기술을 공유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한다. Gamsso(2019, 2021)도 중국이 자신들의 무역 및 투자 등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주변국들에게 언론통제나 인권 억압과 같은 권위주의적 통제 정책을 확산시켜 왔다고 주장한다. 주변국 정부 입장에서도 중국이 통제정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권력유지 하는 것을 모방하여 정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고 권력의 기반을 공고화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주변국 정부의 중국식 통제정책의 도입은 주변국 개인들의 권위주의적 통제에 대한 수용성을 증가시킨다. 개인들은 민주적 가치의 핵심적인 요

소인 개인의 자유나 인권에 대한 통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중국이 안정적인 체제유지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지역 내에서 영향력이 확대할수록 주변국 정부들이 권위주의적 통제정책을 모방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개인들의 권위주의적 가치나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게 된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개인들의 중국식 경제성장모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증가와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제 정책에 대한 경험 증가는 주변국 시민들이 권위주의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인식을 갖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주변국 개인들이 중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권위주의적 경제성장 모델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주적 가치의 희생을 그 비용으로 지불해도 된다는 인식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개인일수록 자국 정부가 도입하는 중국식 통제정책에 순응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민주적 가치와 정책 침식되는 것을 용인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증가할수록 주변국 개인들은 민주적 가치를 절대적으로 옹호하기보다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제한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가설 1. 주변국 개인들이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을 더 옹호할수록 권위주의적 가치와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증가한다.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주변국의 레짐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권위주의 체제 내에서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고, 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평가가 중첩되어 권위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중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현재의 권위주의 체제를 옹호하거나 권위주의적 가치를 더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반면에, 민주주의 체제 내의 시민들은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을 긍정적으로 평가 할수록 권위주의적 제도나 가치에 대한 수용성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공고화된 민주주의 내에서도 민주주의의 비효율적인 정책집행이나 정치과정으로 인해 체제에 대한 피로도가 높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보이는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개인들이 권위주의 체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위주의적 제도나 가치를 하나의 대안적인 방안으로 평가하면서 민주주의가 침식(erosion)되거나 민주주의가 퇴보(backsliding)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거나 침체된 경우 중국식 발전모델을 대안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 개인들은 개인의 자유나 인권 침해를 그 비용으로 지불해서라도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내 시민들은 현 중국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민주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 관대하게 되고 권위주의적 제도나 가치를 옹호할 가능성이 커진다.

가설 2 주변국 개인들이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을 더 옹호할수록 권위주의적 가치와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증가하는 경향은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IV. 연구설계

동아시아 시민들 사이에서 권위주의의 확산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시안 바로미터 조사(Asian Barometer Survey; ABS)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ABS 데이터는 아시아 국가 시민들의 인식조사로 한국을 비롯하여, 대만, 중국, 일본, 몽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등에서 3~4년 주기로 2000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01년 대만에서 처음 실시한 이후로 여러 동아시아 국가에서 20년 이상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개인들의 정부평가, 경제평가, 사회적 자본, 정치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및 사회적 가치 전반에 대한 설문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10년 이후 3차 조사(3rd Wave) 부터는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가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변국들의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가시화된 2010년 이후 부터 2019년 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여 ABS 3차 조사부터 5차 조사를 포함하였다. 중국의 지역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연구이므로 당사국인 중국과 홍콩²⁾을 제외한 한국, 일본, 몽골, 필리핀,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12개 국가를 포함하였다. 총 59,911의 표본 중에서 분석에 포함된 모든 문항에 대답하지 않은 샘플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총 샘플의 수는 17,511이다.

2) ABS는 중국이 홍콩과 일국양제를 표방하고 있어 본토 중국과 홍콩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홍콩을 중국의 일부로 보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 종속변수

이 연구에서는 종속 변수로 총 네 가지의 ABS 문항을 활용하고 있다. 첫째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상호 간의 선호를 묻는 5점 척도 문항이다. 경제발전이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변한 경우에는 1로, 경제성장보다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고 답변한 경우에는 5로 코딩하였다. 나머지 세 문항은 정부의 언론과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으로, 이를 대리변수로 활용하여 권위주의적 제도나 가치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을 측정하였다: 1)정부는 어떤 주장이 사회적으로 논의될 것인지 여부는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 2)정부 지도자들은 집안의 가장과 같아서 국민은 그들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3)사람들이 단체를 많이 결성하면 공동체의 조화가 깨질 것이다. 이 세 문항은 모두 4점 척도로, 1은 서술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음을, 4는 강한 동의를 의미한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주변국 시민들의 중국에 대한 평가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주변국 개인들의 중국에 대한 평가를 직접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문항의 질문은 “중국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이며, 중국의 지역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1,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4로 코딩하였다.

3. 통제변수

동아시아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에 대한 평가와 관련될 수 있는 변수들을 지역적 특이성을 고려하기 위해 통제하였다. 우선 동아시아에서 기존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미국에 대한 인식이 시민들의 정부와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4점 척도로 측정된 개인들의 미국에 대한 주관적 평가(미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포함하였다. 4는 가장 긍정적인 평가, 1은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국가의 경제상태에 대한 평가에 따라 경제 문

제 등 사회이슈에 따른 정치제도에 대한 평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관적인 국가경제평가(경제평가) 변수를 포함하였다.³⁾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면 5에 가까울수록 현재의 국가 경제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 역시 개인들의 민주주의와 정치제도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⁴⁾ 정부평가는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면 1은 매우 불만족, 4는 매우 만족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정치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나이, 교육수준 등을 통제하였다. 여성(여성)은 남성인 경우 0, 여성은 1로 코딩하였고, 마지막으로 교육수준(교육수준)은 10점 척도로 1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10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의미한다.

국가별 차이를 보정하기 하기 위해 국가수준의 변수도 통제하였다. 정치체제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레짐타입 변수(권위주의)를 포함시켰다. 권위주의 변수는 Geddes et al.(2014)의 권위주의 레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당해 연도에 권위주의 체제이면 1, 민주주의 체제인 경우에는 0을 의미한다.⁵⁾ 또한 개별 국가의 정치체제에서 오는 제도적 특징을 고려하기 위해 Polity 점수(Polity)도 포함시켰다(Marshall & Gurr 2020). Polity 점수는 해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10점 척도(0~10)로 변환하였으며, 높은 점수 일수록 민주적 제도의 요소를 더 많이 갖춘 체제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 간 중국과의 관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연간 원조(중국의 원조) 규모를 포함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Dreher et al.(2021)의 Global Chinese Official Finance Dataset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해당연도의 중국원조 총액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별 국가의 크기와 인구규모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인구(인구)와 1인당 국민총생산(1인당 GDP) 변수를 포함시켰다. 인구와 국민총생산의 데이터는 Penn World Table(Ver.10)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두 변수 모두 자연로그를 취하였다(Feenstra et al. 2015).

3) 경제평가는 “오늘날 국가경제상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답변을 활용하였다.

4) 정부평가는 “현 정부에 대해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족하고 있는가”라는 문항에 대한 답변을 활용하였다.

5) Geddes et al.(2014)의 데이터는 2011년 까지만 포함하고 있어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데이터는 Wahman et al.(2013) Authoritarian Regime Dataset과 Magaloni et al.(2013)의 Autocracies of the World Dataset, Freedom House의 Freedom House Index, 마지막으로 Polity V의 Polity 스코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연장하였다.

V. 분석결과

권위주의의 확산의 측면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주변국 시민들의 중국에 대한 평가가 민주적 또는 권위주의적 제도나 가치에 대한 태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다층모형(multilevel model) 및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ordered logistic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⁶⁾ 다층모형은 통제되지 않은 국가 간 차이에서 오는 편향성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은 종속변수의 특징에 더 중점을 두어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특히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을 활용할 때는 국가별 차이에 의한 시민들의 이분산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를 클러스터로 통제한 후 군집강건표준오차(Cluster Robust Standard Errors; CRSE)를 계산하여 고려하였다. 또한 모집단 수준의 분석을 위해 가중치(weight)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표 1>은 중국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사이의 선호를 다층모형분석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모델(1)을 보면, 중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 변수의 계수가 음수이며 통계적으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p<.01$). 중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증가할수록 민주주의 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델(2)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에 따라 이러한 효과가 서로 다른가를 분석하고 있는데, 상호작용항(중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권위주의)와 관련된 변수 중에서 오직 중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 변수의 계수만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내의 개인들이 중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경제성장을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개인일수록 상대적으로 민주적 제도가 가치를 다른 문제에 비해서 부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부가적으로 현재의 경제 상태와 정부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 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은 개인일수록 민주주의를 경제성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p<.05$). 또한 국가수준에서 Polity 점수가 낮은 국가의 국민일수록 경제성장을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p<.05$). 비록 90%의

6) 본 논문의 통계적 분석은 R version 4.1.2 환경 하에서 이루어졌다. 다층모형은 mle4 package(version 1.1)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은 survey package(version 4.1)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1인당 GDP가 낮은 국가에서도 개인들이 민주주의보다는 경제발전을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다층모형 분석결과: 민주주의가 경제성장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가 아닌가?

	민주주의가 경제성장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가 아닌가?	
	(1)	(2)
미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	0.005 (0.014)	0.005 (0.014)
중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	-0.051*** (0.013)	-0.056*** (0.016)
권위주의	-0.453 (0.357)	-0.490 (0.364)
중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권위주의		0.014 (0.027)
경제평가	0.034*** (0.011)	0.034*** (0.011)
정부평가	0.105*** (0.013)	0.105*** (0.013)
여성	-0.076*** (0.020)	-0.076*** (0.020)
나이	0.002** (0.001)	0.002** (0.001)
교육수준	0.020*** (0.005)	0.020*** (0.005)
Polity	-0.142*** (0.026)	-0.142*** (0.026)
중국의 원조(logged)	-0.002 (0.002)	-0.002 (0.002)
인구(logged)	-0.026 (0.139)	-0.026 (0.140)
1인당 GDP(logged)	-0.263* (0.141)	-0.266* (0.141)
상수	5.871*** (1.586)	5.911*** (1.589)
N	17,511	17,511
Log Likelihood	-29,781.130	-29,783.700
Akaike Inf. Crit.	59,592.260	59,599.390
Bayesian Inf. Crit.	59,708.820	59,723.720

Note: * p<0.1; ** p<0.05; *** p<0.01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개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에 따라 권위주의적 제도나 가치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분석하였다. <표 2>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권위주의적 제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로짓(logit)과 오즈비(Odd Ratio; OR) 결과로 가설 1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우선 중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 변수의 로짓 결과가 양수이고, t값 또한 4.22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p<0.01). 따라서 중국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평가가 증가할수록 정부가 사회의 이슈를 통제하고 언론을 통제해도 된다고 대

답하는 비율이 증가하지만, 권위주의 국가 내에서 시민들의 중국에 대한 평가와 종속변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지는 않다. 구체적으로 오즈비의 값을 보면 1.284이고 95% 신뢰수준에서 1에 걸쳐 있지 않으므로 중국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평가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약 28%씩 정부의 언론 통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 < .05$). 주변국 개인들의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따라 권위주의적 가치를 더 옹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 정부가 특정한 생각이 그 사회에서 논의될지 여부

	Logit			Confidence Interval(95%)		
	Coeff.	SE	t	OR	0.025	0.975
미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	-0.028	0.076	-0.372	0.972	0.837	1.129
중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	0.250	0.059	4.222	1.284	1.143	1.442
권위주의	-0.138	0.701	-0.196	0.871	0.221	3.443
경제평가	0.031	0.031	1.014	1.032	0.971	1.096
정부평가	-0.100	0.048	-2.071	0.905	0.823	0.995
여성	-0.023	0.051	-0.448	0.978	0.885	1.079
나이	-0.003	0.003	-0.821	0.997	0.991	1.004
교육수준	-0.096	0.025	-3.875	0.909	0.866	0.954
Polity	-0.055	0.108	-0.509	0.947	0.766	1.170
중국의 원조(logged)	0.004	0.011	0.355	1.004	0.982	1.026
인구(logged)	-0.259	0.097	-2.664	0.772	0.638	0.934
1인당 GDP(logged)	-0.561	0.235	-2.391	0.570	0.360	0.904
N	17,511					

<표 3>은 권위주의와 상호작용항(중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권위주의)을 포함한 모형의 결과로 가설 2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중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 변수의 로짓 결과가 양수이고, t값 또한 2.68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 .01$). 하지만 권위주의와 상호작용항(중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권위주의)은 통계적으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 하지는 않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중국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평가가 증가할수록 정부가 사회의 이슈를 통제해도 언론을 통제해도 된다고 대답하는 비율이 증가하지만, 권위주의 국가 내에서 시민들의 중국에 대한 평가와 종속변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오즈비의 값이 1.206로 중국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평가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약 20%씩 정부의 언론 통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 < .05$). 즉,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따라 권위주의적 가치를 선호하는 경향성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Gamso(2021)가 중국과 교역량으로 측정된 인접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중국과 유사한 언론통제정책을 사용하며, 이러한 경향성은 권위주의 국가보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 높다는 경험적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표 3>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 정부가 특정한 생각이 그 사회에서 논의될지 여부

	Logit			Confidence Interval(95%)		
	Coeff.	SE	t	OR	Lower	Upper
미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	-0.033	0.075	-0.435	0.968	0.835	1.122
중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	0.187	0.070	2.681	1.206	1.052	1.383
권위주의	-0.610	0.950	-0.642	0.543	0.084	3.496
중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권위주의	0.188	0.160	1.179	1.207	0.883	1.650
경제평가	0.032	0.032	0.993	1.032	0.969	1.100
정부평가	-0.097	0.050	-1.945	0.908	0.824	1.001
여성	-0.022	0.051	-0.441	0.978	0.886	1.080
나이	-0.003	0.003	-0.804	0.997	0.991	1.004
교육수준	-0.095	0.024	-3.969	0.909	0.868	0.953
Polity	-0.048	0.100	-0.476	0.953	0.783	1.160
중국의 원조(logged)	0.004	0.011	0.330	1.004	0.982	1.026
인구(logged)	-0.259	0.096	-2.700	0.771	0.639	0.931
1 인당 GDP(logged)	-0.575	0.233	-2.468	0.563	0.357	0.888
N	17,511					

분석결과의 타당도(robustness)를 검증하기 위해 유사한 권위주의적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를 문항을 사용한 분석도 앞선 <표 3>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Appendix 2 참고). 권위주의 제도에 대한 두 가지 문항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정부의 수반은 가장과 비슷한 역할로, 그들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와 “사회의 안정성은 사람들이 많은 (사회) 단체를 조직할수록 위협받는다.”는 문항에서도 비슷하게 민주주의 체제 내의 시민들의 경우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높을수록 위의 서술에 대해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95% 신뢰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V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의 부상이 주변국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대해 권위주의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ABS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사례를 분석하였다. 최근 중국이 G2로 부상하면서 동아시아 내에서도 중국의 부상에 따른 그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 중국모델이 대안적 성장모델로 인지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세계질서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성장과 영향력 증가가 권위주의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권위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확산에 대한 논의는 주로 민주주의의 확산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2000년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빠른 경제성장에 더불어 지역 내에서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권위주의의 확산 논의에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Ambrosio 2010; Chou et al. 2017; Tansey et al. 2017). 기존의 연구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주변의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를 지연시키거나 민주적 제도의 침식시키거나 또는 정책의 수출을 통해 권위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민주주의 또는 권위주의의 확산에 대한 논의는 주로 거시적 관점에서 체제나 정책의 변동과 같은 제도적 관점에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권위주의의 확산이 주변국 개인들의 차원에서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민주주의 발전과 쇠퇴가 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그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의 인식과 행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론적 모델로 이 연구에서는 전시효과와 제도도입에 따른 학습과정이라는 두 가지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다. ABS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경험적 분석 결과, 동아시아 국가의 개인들이 중국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민주주의 보다 경제성장이 더 중요한 이슈라고 평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 일수록 가부장적 국가관을 긍정하거나 국가의 언론통제나 자유로운 시민운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강하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경향성은 권위주의 국가보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가설 2의 주장처럼 민주주의에서 중국을 더 적극적으로 대안적 모델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 상승이 지역 내 국가 시민들에게 민주적 제도나 가치를 저평가하고 권위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비율이 증가하게 함으로서 권위주의의 확산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함의와 유의미한 경험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며, 차후의 연구에서는 이에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중국의 부상에 따라 권위주의가 어떻게 주변국 개인들에게 확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인과적 경로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중국의 부상이라는 국제정치적 요인과 주변국 개인들의 정치제도에 대한 인식 또는 태도 변화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적 거리가 존재한다. 또한 개인들의 인식이나 태도는 국제정치적 변수보다 국내정치적 요인의 영향 하에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따라서 양자 사이의 인과적 설명을 좀 더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양자 사이의 매개변수나 양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변수의 가능성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개별 국가의 정치사회적 특징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사이의 개별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개인 수준 및 국가 수준의 변수를 포함시키고 개별국가의 잠재적인 특징을 고려할 수 있는 분석모델을 활용하였지만 여전히 데이터와 변수의 한계로 인해 동아시아 개별 국가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편향성을 완벽히 통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관계도 상이하고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수 있는 데이터와 변수의 개발 및 활용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부상과 권위주의의 확산과 관련된 직접적 데이터를 수집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들의 정치, 사회 일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ABS 데이터를 대리변수로 활용하고 있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중국의 부상과 그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중국의 부상과 다른 권위주의의 확산을 좀 더 명확하게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의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세계질서를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성이 높다.

참고문헌

- Alesina, Alberto, Sule Özler, Nouriel Roubini & Phillip Swagel. 1996. "Political Instability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Economic Growth* 1(2), 189-211.
- Ambrosio, Thomas. 2009. *Authoritarian Backlash: Russian Resistance to Democratization in the Former Soviet Union*. Surrey: Ashgate Publishing, Ltd.
- _____. 2010. "Constructing a Framework of Authoritarian Diffusion: Concepts, Dynamics, and Future Research."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s* 11(4), 375-392.
- _____. 2012. "The Rise of the 'China Model' and 'Beijing Consensus': Evidence of Authoritarian Diffusion?" *Contemporary Politics* 18(4), 381-399.
- Bader, Julia, Jörn Grävingholt & Antje Kästner. 2010. "Would Autocracies Promote Autocracy? A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 on Regime-type Export in Regional Neighbourhoods." *Contemporary Politics* 16(1), 81-100.
- Bailey, Nick. 2017. "East African States Adopt China's Playbook on Internet Censorship." Freedom House. <https://freedomhouse.org/article/east-african-states-adopt-chinas-playbook-internet-censorship> (2022/5/25 검색).
- Bräutigam, Deborah. 2009. *The Dragon's Gift: the Real Story of China in Afric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rinks, Daniel & Michael Coppedge. 2006. "Diffusion Is No Illusion: Neighbor Emulation in the Third Wave of Democrac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9(4), 463-489.
- Cao, Xun. 2010. "Networks as Channels of Policy Diffusion: Explaining Worldwide Changes in Capital Taxation, 1998-2006."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4(3), 823-854.
- Carothers, Thomas. 2006. "The Backlash Against Democracy Promotion." *Foreign Affairs* 85(2), 55-68.
- Chou, Mark, Chengxin Pan & Avery Poole. 2017. "The Threat of

- Autocracy Diffusion in Consolidated Democracies? The Case of China, Singapore and Australia." *Contemporary Politics* 23(2), 175-194.
- Danneman, Nathan & Emily Hencken Ritter. 2014. "Contagious Rebellion and Preemptive Repress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8(2), 254-279.
- De Graaff, Naná & Bastiaan Van Apeldoorn. 2018. "US-China Relations and the Liberal World Order: Contending Elites, Colliding Visions?." *International Affairs* 94(1), 113-131.
- Dreher, Axel, Andreas Fuchs, Bradley Parks, Austin Strange & Michael J. Tierney. 2021. "Aid, China, and Growth: Evidence from a New Global Development Finance Dataset."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13(2), 135-74.
- _____ & Andreas Fuchs. 2016. "Rogue Aid? An Empirical Analysis of China's Aid Allocation."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48(3), 988-1023.
- Elkins, Zachary. 2010. "Diffusion and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Europ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3(8-9), 969-999.
- Feenstra, Robert C., Robert Inklaar & Marcel P. Timmer. 2015. "The Next Generation of the Penn World Table." *American Economic Review* 105(10), 3150-82.
- Flores-Macías, Gustavo A. & Sarah E. Kreps. 2013. "The Foreign Policy Consequences of Trade: China's Commercial Relations with Africa and Latin America, 1992-2006." *The Journal of Politics* 75(2), 357-71.
- Fordham, Benjamin O. & Victor Asal. 2007. "Billiard Balls or Snowflakes? Major Power Prestige and the International Diffusion of Institutions and Practic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1(1), 31-52.
- Gamso, Jonas. 2019. "China's Rise and Physical Integrity Rights in Developing Countrie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6(4), 722-748.
- _____. 2021. "Is China Exporting Media Censorship? China's Rise,

- Media Freedoms, and Democrac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27(3), 858-883.
- Geddes, Barbara, Joseph Wright & Erica Frantz. 2014. "Autocratic Breakdown and Regime Transitions: A New Data Set." *Perspectives on Politics* 12(02), 313-331.
- Gleditsch, Kristian Skrede & Michael D. Ward. 2006. "Diffusion and the International Context of Democratiz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60(4), 911-933.
- Goldring, Edward & Sheena Chestnut Greitens. 2020. "Rethinking Democratic Diffusion: Bringing Regime Type Back I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53(2), 319-353.
- Goodliffe, Jay & Darren Hawkins. 2017. "Dependence Networks and the Diffusion of Domestic Political Institution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61(4), 903-929.
- Gunitsky, Seva. 2018. "Democratic Waves in Historical Perspective." *Perspectives on Politics* 16(3), 634-651.
- _____. 2014. "From Shocks to Waves: Hegemonic Transitions and Democratization in the Twentieth Centu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68(3), 561-597.
- Halper, Stefan. 2010. *The Beijing Consensus: How China's Authoritarian Model Will Dominate the Twenty-First Century*. Philadelphia: Stefan Halper.
- Huntington, Samuel P.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Kastner, Scott L. 2016. "Buying Influence? Assessing the Political Effects of China's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60(6), 980-1007.
- Koesel, Karrie J. & Valerie J. Bunce. 2013. "Diffusion-Proofing: Russian and Chinese Responses to Waves of Popular Mobilizations against Authoritarian Rulers." *Perspectives on Politics* 11(3), 753-68.
- Lankina, Tomila, Alexander Libman & Anastassia Obydenkova. 2016. "Authoritarian and Democratic Diffusion in Post-communist Region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9(12), 1599-1629.

- Layne, Christopher. 2018. "The US-Chinese Power Shift and the End of the Pax Americana." *International Affairs* 94(1), 89-111.
- Lim, Darren J. & Rohan Mukherjee. 2019. "What Money Can't Buy: The Security Externalities of Chinese Economic Statecraft in Post-War Sri Lanka." *Asian Security* 15(2), 73-92.
- Magaloni, Beatriz, Jonathan Chu & Eric Min. 2013. "Autocracies of the World, 1950-2012." *Version 1.0. Dataset, Stanford University*.
- Malik, Ammar A., Bradley Parks, Brooke Russell, Joyce Jiahui Lin, Katherine Walsh, Kyra Solomon, Sheng Zhang, Thai-Binh Elston & Seth Goodman. 2021. "Banking on the Belt and Road: Insights from a New Global Dataset of 13,427 Chinese Development Projects." *Williamsburg, VA: AidData at William & Mary*. <https://www.aiddata.org/publications/banking-on-the-belt-and-road> (2022/5/25 검색).
- Marshall, Monty G. & Ted Robert Gurr. 2020. "Polity 5: Political Regime Characteristics and Transitions, 1800-2018." *Center for Systemic Peace* 5.
- Melnykovska, Inna, Hedwig Plamper & Rainer Schweickert. 2012. "Do Russia and China Promote Autocracy in Central Asia?" *Asia Europe Journal* 10(1), 75-89.
- North, Douglass C.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moes, Alexander James Gaspar, & César A. Hidalgo. 2011. "The Economic Complexity Observatory: An Analytical Tool for Understanding the Dynamics of Economic Development." in *Workshops at the Twenty-Fifth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24 August.
- Starr, Harvey. 1991. "Democratic Dominoes: Diffusion Approaches to the Spread of Democracy in the International System."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5(2), 356-381.
- Tansey, Oisín, Kevin Koehler & Alexander Schmotz. 2017. "Ties to the Rest: Autocratic Linkages and Regime Survival."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50(9), 1221-1254.
- Tierney, Michael J., Daniel L. Nielson, Darren G. Hawkins, J. Timmons

- Roberts, Michael G. Findley, Ryan M. Powers, Bradley Parks, Sven E. Wilson, & Robert L. Hicks. 2011. "More Dollars than Sense: Refining Our Knowledge of Development Finance Using AidData." *World Development* 39(11), 1891-1906.
- Wang, Ban. 2017. *Chinese Visions of World Order: Tianxia, Culture, and World Politic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Weber, Valentin. 2017. "Why China's Internet Censorship Model Will Prevail Over Russia's." 12 Decembe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s://www.cfr.org/blog/why-chinas-internet-censorship-model-will-prevail-over-russias> (2022/5/25 검색).
- Weyland, Kurt. 2012. "Diffusion Waves in European Democratization: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Development." *Comparative Politics* 45(1), 25-45.
- _____. 2019. "Why Some Democracy Protests Do Diffus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63(10), 2390-2401.
- Yan, Xuetong. 2018. "Chinese Values vs. Liberalism: What Ideology Will Shape the International Normative Order?"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11(1), 1-22.

Appendix 1

기술통계

〈표 A1〉 기술통계표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정부 수반에 대한 평가	17511	2.55	0.82	3	1	4.00
민주주의 vs 경제성장	17511	2.23	1.34	2	1	5.00
가부장적 정부	17511	2.45	0.89	2	1	4.00
정부의 언론통제	17511	2.51	0.9	3	1	4.00
시민단체와 사회의 안정성	17511	2.65	0.88	3	1	4.00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	17511	2.51	0.82	3	1	4.00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	17511	2.83	0.75	3	1	4.00
권위주의	17511	0.37	0.48	0	0	1.00
경제평가	17511	2.96	0.96	3	1	5.00
정부평가	17511	2.49	0.85	2	1	4.00
여성	17511	0.48	0.5	0	0	1.00
나이	17511	43.96	15.4	43	17	90.00
교육수준	17511	6.12	2.35	7	1	10.00
Polity	17511	8.32	2.04	9	3.5	10.00
중국의 원조	17511	265,085,627	881,190,133	0	0	4,389,298,000
인구(백만)	17511	68.4	69.66	51.23	2.94	270.63
1인당 GDP	17511	24,277	18,429	16,929	3,481	76,938
중국의 원조(logged)	17511	4.78	8.43	0	0	22.20
인구(logged)	17511	3.72	1.14	3.96	1.37	5.60
1인당 GDP(logged)	17511	9.76	0.87	9.74	8.15	11.25

Appendix 2

권위주의적 국가관 및 국가통제에 대한 추가적 분석 결과

〈표 A2〉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 정부의 수반은 가장과 비슷한 역할로, 그들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Logit			Confidence Interval(95%)		
	Coeff.	SE	t	OR	Lower	Upper
미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	0.066	0.077	0.854	1.068	0.918	1.242
중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	0.218	0.071	3.056	1.243	1.081	1.43
권위주의	0.842	0.362	2.327	2.321	1.142	4.719
중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						
권위주의	-0.023	0.091	-0.252	0.977	0.817	1.169
경제평가	-0.038	0.042	-0.888	0.963	0.886	1.047
정부평가	-0.088	0.082	-1.073	0.916	0.781	1.075
여성	-0.054	0.054	-1.001	0.947	0.852	1.053
나이	-0.001	0.003	-0.310	0.999	0.992	1.006
교육수준	-0.099	0.018	-5.392	0.905	0.873	0.939
Polity	0.130	0.081	1.619	1.139	0.973	1.334
중국의 원조(logged)	0.007	0.012	0.627	1.008	0.984	1.031
인구(logged)	-0.008	0.132	-0.064	0.992	0.765	1.285
1 인당 GDP(logged)	-0.393	0.167	-2.359	0.675	0.487	0.936
N	17,511					

〈표 A3〉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 사회의 안정성은 사람들이 많은 (사회) 단체를 조직 할수록 위협받는다.

	Logit			Confidence Interval(95%)		
	Coeff.	SE	t	OR	Lower	Upper
미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	-0.107	0.051	-2.094	0.899	0.814	0.993
중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	0.050	0.028	1.769	1.051	0.995	1.111
권위주의	0.406	0.459	0.884	1.501	0.61	3.69
중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						
권위주의	0.145	0.110	1.314	1.156	0.931	1.435
경제평가	0.040	0.024	1.687	1.041	0.993	1.091
정부평가	-0.058	0.058	-0.995	0.944	0.843	1.057
여성	0.033	0.034	0.953	1.033	0.966	1.105
나이	0.000	0.002	0.076	1	0.996	1.004
교육수준	-0.033	0.028	-1.172	0.968	0.916	1.022
Polity	0.005	0.095	0.057	1.005	0.835	1.211
중국의 원조(logged)	0.002	0.013	0.126	1.002	0.976	1.028
인구(logged)	-0.142	0.125	-1.134	0.868	0.679	1.109
1 인당 GDP(logged)	-0.159	0.146	-1.085	0.853	0.641	1.136
N	17,511					

Abstract

The Rise of China and Autocracy Diffusion: the Case of East Asia

Dongjin Kwak ■ Korea University

Does the rise of China impact individuals' evaluation of democracy and autocracy? This article explores how autocracy diffusion comes up among individuals in neighboring countries of China. Using Asian Barometer Survey data between 2010 and 2019, I argue that the emergence of China can affect individuals' assessments of autocratic norms and practices in neighboring countries of China. The empirical results support that individuals in East Asian countries are more likely to assess authoritarian norms and practices positively when an individual evaluates the influence of China more positively. This tendency is more inclined in democratic countries than autocracie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emergence of strong autocracy can negatively impact individuals' evaluation of democratic norms and values.

Key Words: Autocracy, Democracy, Diffusion, China, East Asia